

미사일 발사로 北에 '레드라인' 경고

문재인 대통령,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 지시 북한 지휘부 타격훈련 공개... '작전계획 5015' 공세적 대응 독일서 개최되는 G20서 수위 높은 대북 경고 메시지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北)탄도미사일(CTBM) 시험 발사를 선언한 데 대해 이해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을 지시하는 등 경도 높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장남(장) 문 대통령은 지사에 이은 브리핑 미국 대통령의 동의를 한미 미사일 부대는 5일 북한의 CT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무력시위를 실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 훈련에서 한국군의 현무-2A와 B군의 ATACMS(아티팩스)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유사시 적 도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현무-2A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이며, B군은 운용하는 아티팩스의 사거리는 300km이며, 대전장 로켓포시팅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적이다. 게다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지휘부 타격훈련을 공개한 것도 처음이다.

한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바로 다음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이

북한의 CTBM 발사시 핵심사실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15'에 기초한 공세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데이비드 카머런 전 영국 총리와 집현정 자라에서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의 한반도 비핵화 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어서면 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도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지 보냈지만 일부일도 되지 않아 CTBM을 발사한 북한에 '보복'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대북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우리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주변국들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G20 개막 전날인 오는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아예 상호 일본 중



독일로 출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이사가 5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독일 공식 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7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8일에는 인도·프랑스·호주와 각각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를 반전에 초청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이슈를 둘러싼 다자외교 테이블이 펼쳐진다. 문 대통령은 다자외교뿐 아니라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별도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반도 안정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독일 순방기간

중세 통일 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신(新) 베를린 선언'도 전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과 '신 베를린 선언'에서 기존의 온건한 메시지와는 한층 수위 높은 경고성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

'전북, 농생명산업 수도로 거듭나'

김춘진 위원장, 농림부장관에 공약이행 요청

전북이 농생명산업 수도로 환경상태 할 수 있도록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5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림부)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정책공약이행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지 지역위원장(전주시 을), 박희승 지역위원장(남원읍 임순동), 김생기 정읍시장, 안오봉 도농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새만금 개발과 관련, 농지가든은 농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조속한 용지 매입을 위해 농지가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인 청년 농업은 인력이다"며 "ICT 농기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플랜 및 전담기계 사업과 공사에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 농생명산업수도 육성은 농림부의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저 농기계, 미생물, 지역별 신소재유류 및 차유농업과 등 정책관련사업들이 농림부 사업 방향성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대 대선에서 전북 5대 농생명 클러스터(야산·식품, 김치·종자·ICT농기계, 정유·이공 등 새만금·황간농업)를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공약한 것도 한 몫한다.

전북도당은 아예 발맞춰 최근 도내 14개 지자체와 대통령 공약 이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농생명분야 사업현황을 취합 정리했다.

전북도당은 관련 사업들이 문 대통령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약이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익산시의 식용 분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차 신단지 조성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건립, 김제시의 종자·ICT농기계 분야는 ▲황간유류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업 공공협력 종자개발센터 구축 ▲김제공공청사 확충, 원산 종자산업클러스터 조성 ▲김제유류 다목적 자원화 농기계 개발 ▲수원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 정읍시의 미생물 분야는 ▲미생물 융복합 정책과화기술원 건립 ▲ICT융합 의보건업 비즈니스센터 조성, 새만금 집단 농업 분야는 ▲스마트농기계 혁신부품 및 농기계 품질검증 테스트 베드구축 ▲농생명 청년 창업특구 조성 ▲새만금 간척지 활용농업연구소 건립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과 연계해 있어 상당히 높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예상된다.

김춘진 위원장은 "농생명 밸리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도 부합한다"며 "농민 부가 공약 이행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나서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진성 기자

최경환,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에 문제"

"국토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5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의원들이 불참으로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질의에 나선 국민의당 의원들은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 '주거급여 증액', '코레일과 SR 통합 및 SRT 전라선 노선 확충' 등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토교통부(이하)가 조성한 토지에 공급한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 허가지구, 광주 황간지구, 여수 동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있는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사례로 들어 논의를 펼쳤다.

(전주 허가지구의 부영아파트는 18평(80.9㎡) 규모의 경우 당초 임대 계약은 보증금 9000만원, 임대료 30만원이었지만, 연 8% 인상으로 9900만원에 월 31만8000원이 됐다.)

이어 김경이 장관에게 기존 임대료 신고

국토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주승용 "코레일·SR 통합 필요"
정동영, "주거급여 증액해야"

제를 개선해 사전신고(승인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고, 김경이 장관은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국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전주부영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주택 개정안'(연 8% 임대료 인상을 현행 8%로)을 소개하며, 김경이 장관에게 임대료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주승용 의원은 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 조의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정부에서 불속적으로 진행된 민자 추진으로 철도 공공성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수서발 고속열차(SRT)에 전라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질의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으로 효율이 개선되고 국토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대 촉구 결의안'을 소개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적절한 사안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주거급여 관련 질의에 나서며,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을 인용,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11만6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만 가구가 평균보다 낮은 수급액을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며,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인상을 평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 '주거급여 증액', '코레일과 SR 통합 및 SRT 전라선 노선 확충' 등 사안에 대한 방안마다 서로 격려하며 즉석에서 지도

를 교환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상급위에서 다루는 추경 예산안 민생과 직결되고 시기적으로 국회가 임의한 사항"이라며, "둘 더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되기 위해 여당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고 야당은 국가 예산이 민생을 위해 쓰이는 지 집중해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민의당 도당, 오늘 대선평가 간담회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지난 대선을 돌아보며 담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낸다. 도당은 오는 6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홀에서 대선평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민, 황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선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 선거운동 실무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에 내무에서 바라본 선거운동 진행 과정 및 문제점 등 평가가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 "퇴임 후 사의 변호사 안해"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의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조 후보자는 정관계와 관련 '사업 불신 요인이 많은 게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정관계의 의혹이 자라 갖고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징계와 관련에서도 경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관 특검은 특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며 "알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고 보다 많은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권위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도 민주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법관이 되면 권위와 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부안군
BUAN-GUN

扶來滿福-부안에 오시면 복 받습니다!

“핫(hot) 뜨거운 여름을 부탁해!! 축복의 땅 부안아”

부안해수욕장 개장기간 : 7. 1 ~ 8. 15(46일간)

위도해수욕장, 오양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